

# 선거제 패스트트랙 ‘막판 진통’

###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공수처 설치법 등 세부 논의 바른미래, 당론 채택 놓고 내분 격화...평화당은 추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지도부는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일부의 반대와 선거법과 함께 처리할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단,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해 정당별 추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우선 정의당은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진했다.

평화당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추진하고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당은 수석대변인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해 최종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내분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 의결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기점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당론 의결을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김 원내대표에 대해 “해당행위”, “징계”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19일 열리는 의총에서 공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다른 문제는 선거법과 함께 처리할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시종일관 이야기한 부분이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5·18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달했고, 의총에서도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얘기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권 조정에 대해 민주당과 상당 부분 다른 타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선거제 개혁은 시대의 사명”

###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명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 사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에 대한 평가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면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 원칙”이라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실패에 국민만 힘들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선거제 패스트트랙·우경화 비판 ‘속제’

### ‘취임 100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로서 취임할 때 “실력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한국당은 정식 지도부가 아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가동 중이었고, 계파 간 갈등은 내연하고 있었으며,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지율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취임 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돌발변수가 나타나며 나 원내대표의 대역투쟁력에 보탬이 됐다.

당장 그는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 카드 등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이를 고리로 갈등과 분열을 반복

해온 한국당의 결속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다행히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민주당과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 앞에는 여전히 숱한 난제가 놓여 있다. 우선 3월 국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대처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당의 목표는 ‘총력 지지’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민생 현안을 국회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 작업과 함께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논란에 당 내부에서 모호하게 대처한 점과 ‘반민특위 발언’ 등으로 한국당의 우경화·강경보수화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아킬레스건 건드려라” 불꽃 튀긴 대정부질문

### 여야, 김학의 성 접대 의혹·장자연 사건·드루킹 집중 거론

여야는 19일 오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드루킹 사건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라며 “김학

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리 없다”며 “만약 야당을 탄압하려고 들면 검찰을 시켜서 하지, 무엇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겠느냐”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 설치기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고위공직자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검증 부실과 수사 외압 의혹까지 비하

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곡상도 의원을 겨냥,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지휘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맞불을 냈다.

김재경 의원은 이날엔 국무총리를 향해 “청와대가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 지사의

등을 때밀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했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며 “안 간다는 김 지사를 등 때밀어 출마시켰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특검을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확대를 비판하는 현수막에 ‘내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김종민 의원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플레가를 내려야 한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라라”며 맞받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의회 84% 결직·영리 거래 금지 ‘모르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결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결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했으며 서울·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결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결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결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합뉴스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10002 point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방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